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응

- '왕이 이니셔티브'의 배경과 함의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the Wang Yi Initiative

박홍서(Park, Hongseo)*

目次

- I. 서론
- II. 탈냉전기 북핵문제의 심화 및 중국의 딜레마
 - 1. 북핵문제의 전개 및 북한의 전략적 의도
 - 2. 중국의 북핵 딜레마: '북한과 미국 사이'
- III. 북핵문제의 대응 방안과 왕이 이니셔티브
 - 1. 북핵문제의 대응 방안과 각국의 입장
 - 2. 왕이 이니셔티브: 비핵화 문제의 균형점 찾기
- IV. 결론 및 전망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응을 중북관계 및 중미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의 정책구상인 소위 '왕이 이니셔티브'의 제기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006년 2월 17일 왕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제의하였다. 왕이는 평화협정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어렵고,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 역

* 강원대학교 강사

시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두 사안의 동시추진을 제기하였다.¹⁾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선택폐기를 강조하면서 왕이 이니셔티브에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속에서 왕이 이니셔티브를 일종의 대북 유화책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²⁾

본 논문은 왕이 이니셔티브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북미 양국의 입장을 균형 맞추려는 중국의 전략적 시도라고 설명한다. 특히, 본 논문은 왕이 이니셔티브가 실현가능성이 낮은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 북핵문제를 관리하려는 정책구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2장에서 북핵문제의 전개 및 중국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제기된 왕이 이니셔티브의 배경과 함의를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향후 대응을 간략히 전망한다.

II. 탈냉전기 북핵문제의 심화 및 중국의 딜레마

1. 북핵문제의 전개 및 북한의 전략적 의도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로 인한 동서 냉전의 붕괴는 미소 양국의 세력권 하에 위치해 있던 한반도 상황을 급변케 하였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상호간 ‘비핵화 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각각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던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결과 남한은 1992년 8월 대중국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북한 역시 미국과의 수교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남한이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미 관계정상화 노력은 합리적 행태일 수

1) “王毅：实现半岛无核化与半岛停和机制转换并行推进，” 中國外交部，2016年2月17日。

<http://www.fmprc.gov.cn/web/wjzb_673089/xghd_673097/t1341212.shtml>; “왕이 ‘중국의 위협 사드 반대...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달성 못해,’” 『연합뉴스』, 2016년 2월 26일.

2) “정부 당국자 ‘얘기할 시점 아냐’...왕이 ‘평화협정’ 제안 거부,”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19일.

밖에 없었다. 사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정권시기부터 대미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1980년 7월 미 하원 의원 솔라즈(Stephen J. Solarz)와의 접견에서 김일성은 북미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강력히 희망하기도 하였다.³⁾ 북한은 대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국전쟁이후 지속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1993년 초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핵시설 추가사찰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자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제 1차 북핵 위기가 전개되었다. 1차 북핵 위기는 결국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로 해소되었으나, 이후 경수로 건설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북핵문제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⁴⁾

한편, 2003년 1월 북한의 전격적 NPT 탈퇴로 제 2차 북핵위기가 전개되었다. 2차 북핵위기는 일련의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합의로 해소되는 듯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또 다시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9.19합의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북미 양국은 2007년 2.13합의 및 10.4 합의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기도 하였으나, 이후 오바마 정권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사실상의 북한 방치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은 핵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명시하는 등 자발

3) Records of Conversation between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and Kim Il Sung and Kim Yong-Nam,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254>>

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선인, 2015, 33쪽.

5)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내에서는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ichel Green,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Gets You Nowhere,” *Foreign Policy*, January 7, 2016 참조.

적인 핵폐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⁶⁾ 더욱이 김정은 정권은 2016년 1월 ‘수소폭탄’ 실험 이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 및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이 핵보유국가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5월 6일 노동당 7차 대회에서도 결정서를 통해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 대국”으로 만들자는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⁷⁾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상쇄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대미관계 정상화의 실패 및 한중관계의 발전으로부터 초래된 대외적 고립감 및 위협인식을 자체적인 핵무장을 통해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⁸⁾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의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드러낸다. 김정은은 “미국이 현 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면서 핵선제공격대상에 올려놓고 온갖 위협과 압살공세를 가하였다”고 강조하고 “강위력한 핵무력 우에 평화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⁹⁾ 이러한 논리는 비록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기도 하지만, 핵개발 기저에 흐르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대외적 위협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국내정치적으로 핵개발을 활용해 미국에 대항하는 정권의 ‘강건함’을 과시함으로써 인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직후마다 그것을 경축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아리랑’ 등과 같은 거대한 공연을 통해 권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극장국가’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핵실험은 일종의 ‘군사적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6)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 첫 명기,” 『한국일보』, 2012년 5월 31일.

7) 『노동신문』, 2016년 5월 9일.

8) Scott D. Sago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2, 181쪽; Steven Denny, “His ‘Other’ Legacy: Kenneth Waltz’s Defense of Nuclear Proliferation,” *Sino-NK*, May 21, 2013.

9) 『노동신문』, 2013년 4월 24일.

10) 극장국가 개념은 정병호·권현익,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참조.

아울러, 북한은 핵개발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통치 정당성의 필수적인 토대라면, 북한 지도부는 핵개발을 통해 안보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그 기반위에서 경제발전을 시도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북한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통해 기존의 ‘선군정치’ 속에서 군사부분에 과도하게 배분됐던 자원들을 경제 영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¹¹⁾

사실, 안보를 확립하고 이후 경제발전에 전력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과거 중국의 행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안보상황을 개선하고 그 맥락속에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¹²⁾ 북한으로서는 현재 대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속에서 핵개발을 그 대체제로 간주하고 그에 기초해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경제발전에 전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중국의 북핵 딜레마: ‘북한과 미국 사이’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과의 세력경쟁 속에서 북한이라는 동맹 자산을 계속 유지해할 필요성과 반대로 북핵문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미국과의 분쟁상황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상존하는 강대국간 ‘협조체제(concert system)’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은 상호간 분쟁을 차단하지는 대전제 아래서 상호 경쟁을 추구하는 일종의 ‘담합적(카르텔)’적 관계를 이룬다. 미중관계 역시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³⁾

소련붕괴 직후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위

11) 김동엽, “제 7차 당대회를 통한 북한의 군사정책 독해,” 『통일뉴스』, 2016년 5월 20일.

12) 刘自强, “中美关系正常化与中国对外开放的启动,” 『理论月刊』, 2008年 第5期, 151쪽.

13)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47집 3호(2007), 77-90쪽. 국제정치에서 카르텔을 구축하려는 강대국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92-93쪽;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서울: 한길사, 2009, 3-7장 참조.

협론'이 제기되고 반면 중국내에서는 반미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등 탈냉전기 초반 미중관계는 갈등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5-96년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한 미중간 군사적 대립은 그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미중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전지구적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경제의 관리, 반테러리즘 등의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차상위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중국은 미국의 과도한 해게모니 관리비용을 분담케 할 수 있는 유력한 국가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타이완 해협 위기에서 보여지듯 미국과의 현격한 국력 차이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최대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전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¹⁴⁾

미중 양국은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1998년 상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면서 상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중국이 제기한 '화평굴기', 2005년 미국이 제시한 '이익상관자(stake-holder)', 그리고 현재 시진핑 정권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는 모두 미중 양국의 '공생'을 강조하는 정치적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¹⁵⁾

2015년 미중간 무역 총액은 5,981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국가이며, 대미 무역 비중은 중국 전체무역의 15%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중국은 대미 무역을 통해 3,657억 달러라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확보하고 있다.¹⁶⁾ 즉, 미국 시장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그만큼 '사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 시장을 '부양'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미 국제 수입에 대량 투자함으로써 미국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한다거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중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14)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47집 3호(2007), 82-83쪽.

1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선인, 2015, 25-26쪽.

16) "2015年美国货物贸易及中美双边贸易概况,"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8094 >

17) 니얼 퍼거슨 씀, 김선영 옮김, 『금융의 지배』, 서울: 민음사, 2012, 282-336쪽.

실제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대미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로 인해 중국내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되기도 하였다.¹⁸⁾ 아울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에 연계해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활용해 특정 국가들의 금융 위기를 조장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미국시장에 대한 중국경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¹⁹⁾

이와 같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중국을 연루시켜 중미관계를 경색시키고 결국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으로서 적극적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사건 직후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国)를 남북한에 차례로 파견해 위기 상황을 중재하였으며,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정에 대해 미국과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도, 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²⁰⁾

한편, 중국으로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심화를 차단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역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조체제가 일종의 카르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배반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에서 카르텔 구성 기업들이 구성원 일방의 독단적인 가격인하 행태를 경계하는 것과 유사하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오바마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18) Kam Wing Cha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Migrant Workers in China: ‘There is No Future as a Labourer; Returning to the Village has No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4.3 (2010), 666-670쪽.

19)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는 로버트 브레너, 『불안 버블: 호황 그 이후, 세계 경제의 그늘과 미래』, 서울: 아침이슬, 2007, 172-175/199-214쪽 참조.

20) “中方重申不允许朝鲜半岛生乱生战,” 『中国新闻网』, 2016年 2月 3日.
<http://www.chinanews.com/gn/2016/02-03/7746916.shtml>

21) 카르텔 구조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의 파레토 최적 상황(협력-협력)이며, 반면 카르텔의 붕괴는 원래의 균형점(배반-배반)으로의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레고리 맨큐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9, 399-417쪽.

Asia)’와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²²⁾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계획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기본적으로 한중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사드배치를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2월 7일 로켓발사 직후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협의하기로 하자,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에 강력히 하였으며, 관영 언론들은 사드배치 강행시 이에 상응한 군사조치를 경고하기도 하였다.²³⁾ 또한, 외교부장 왕이는 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항장이 칼춤을 추는 목표는 유방에게 있다”는 사기의 ‘홍문연(鴻門宴)’ 고사를 인용하며, 미국이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²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확정 발표한 이후 중국의 반발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이례적인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強烈不滿和堅決反對)”를 표명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의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²⁵⁾ 관영언론들은 보다 직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사드와 관련된 한국기업 제재, 사드배치 특정 지역에 대한 제재, 그리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한국의 정계인사의 입국금지를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에 상응한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조치 및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재고를 강조하고 있다.²⁶⁾

이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핵문제에 대한 재고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 및 한국과의 공조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염

22) “希拉里详述重返亚太计划 ‘牵制中国’意味浓厚,” 环球网, 2011年11月11日.
<<http://world.huanqiu.com/roll/2011-11/2163381.html>>

23) “社评：韩国与美商讨部署萨德是战略短视,” 『环球时报』, 2016年2月7日.

24) “王毅：美在韩部署萨德系统是‘项庄舞剑，意在沛公’,” 『环球时报』, 2016年2月13日.

25) 外交部声明,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年7月8日. <<http://www.fmprc.gov.cn/web/zyxw/t1378537.shtml>>

26) “社评：反制萨德, 建议国家采取五项行动,” 『环球时报』, 2016年7月8日; “韩美部署萨德, 中国该重新思考半岛战略了,” 美国中文网, 2016年7月8日. <<http://www.sinovision.net/politics/201607/00380117.htm>>

시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보여왔던 대북제재 의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경색된 북중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상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논리에 기반한다. 중앙정부가 부재한 ‘무정부상태(anarchy)’의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은 상호간의 세력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중국 역시 북중동맹을 강화해 한미동맹에 대항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상을 요약하자면, 현재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동맹국 북한과의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입장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은 이러한 딜레마를 관리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²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주장을 통해 미국 등에 의한 비평화적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²⁹⁾

III. 북핵문제의 대응 방안과 왕이 이니셔티브

북한의 4차 핵실험 국면에서 제기된 왕이 이니셔티브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보다 간결히 요약한 정책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추진을 강조하는 왕이 이니셔티브는 딜레마 관리 차원을 넘어 북핵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왕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이 가지는 안보위협 인식을

27)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Waveland Press, 2010, 5장.

28) 북한의 4차핵실험 후 중국외교부는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016년1월6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16年1月6日.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329896.shtml>

29) 박홍서, “북핵위기사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1호 (2006), 109쪽.

해소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될 수 없으며,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수립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목표가 동시에 추진될 때 비로소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왕이 이니셔티브는 북핵문제의 다양한 대응 방안들 중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핵문제 대응 방안들 중 자국이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을 소거한 후 남은 대안을 왕이 이니셔티브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들중 북핵 인정과 북한 붕괴 전략은 양극단이라 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왕이 이니셔티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중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균형맞추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 북핵문제의 대응 방안과 각국의 입장

첫째, 북핵의 공식적인 인정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을 가져서는 안될 ‘불량국가’ 북한이 핵을 가지려한다고 주변 국가들이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면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한 것은 공식적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합리적 동인이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핵확산을 초래해 미중 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전지구적 핵확산을 자국의 세계모니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더욱이, 이로 인해 동맹국 한국 및 일본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도 미국은 북핵을 인정하기 어렵다. 모로우(James Morrow)가 설명하듯,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은

30) “北 핵보유국 지위 얻기·고강도 제재 국면 전환 이중 포석,” 『서울신문』, 2016년 5월 9일.

자국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대가로 강대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 받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미국의 동북아 동맹자산을 그만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다.³¹⁾

중국은 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전통적 세력경쟁국인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과의 세력경쟁 속에서 실질적인 대북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과거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지원했던 행태와 유사한 것이다.³²⁾ 그럼에도 북핵의 공식적인 인정은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4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의 상반된 극단에는 ‘북한 붕괴’라는 정책 대안이 존재한다. 북한의 붕괴는 북핵문제의 주체가 소멸된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근원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붕괴 대안에 대해 미중 양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 붕괴 전략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러셀(Daniel R. Russel)은 북한 붕괴가 미국의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³⁾ 그럼에도 현재 미국이 북한 붕괴에 대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015년 수립된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 5015(Operation Plan 5015)’는 이를 뒷받침한다. 기존의 작계 5029 등이 북한 급변사태시 미군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면,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

31)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1991), 904-933쪽.

32) T.V. Paul,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na-Pakistani Nuclear/ Missile Collaboration," in Lowell Dittmer, ed., *South Asia's Nuclear Security Dilemma: India, Pakistan, and China*, New York: M.E Sharpe, 2005, 175-188쪽.

33) "美차관보 '北붕괴 전략 아냐...한국 닮은 평화통일 한반도 선호'," 『연합뉴스』, 2016년 3월 26일.

일 동향을 탐지하고 유사시 ‘선제타격’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이러한 북한 붕괴 상황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북한 붕괴는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침공 상황을 가정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왕이는 중국이 북한의 강압외교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북중 양국은 동고동락의 관계라는 사실과 북한이 안보를 필요로 한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⁵⁾ 아울러, 국제적인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6월 1일 방중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과의 접견자리에서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진핑의 발언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³⁶⁾

물론, 미국의 북한 붕괴 전략이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속에서 진행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일정정도 고려할 만한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면적인 대남 도발을 기도해 미중간 전쟁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대북 지원보다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 붕괴를 기도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약소국에 의한 분쟁 연루를 회피하기 위해 강대국들 간에 형성되는 담합적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북한급변사태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행태라 할 수 있다.³⁷⁾

셋째, 북핵에 대한 ‘방치’ 전략이다. 방치 전략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한 무시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초래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소극적 현상유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오마바 정권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일종의 북핵 방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집권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 다소간의 방치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 정권과 달리 북중 정상회담에 나서고 있지 않으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강조 이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4) “내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작계 5015’ 첫 적용,” 『한국일보』, 2016년 2월 8일; Jiwon Song, “U.S. official encourages plan for N.Korea collapse,” *NK News*, May 4, 2016.

35) “王毅回应 ‘半岛若开战中国是否会再抗美援朝,’” 『环球时报』, 2016년 3월 8일.

36) “시진핑, 리수용 만나 ‘북-중 협력 고도로 중시,’”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일.

37) “캠벨 ‘북한 급변논의때 중국 변죽만 울려,’” 『연합뉴스』, 2014년 2월 6일.

그러나 장기적인 맥락에서 북핵 방지 전략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해 보다 대담한 도발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실제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3,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개발해 핵강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왕이 이니셔티브: 비핵화 문제의 균형점 찾기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핵 인정, 북한 붕괴, 그리고 방지 전략은 미중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양자 모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같다면, 북핵문제 대응 방안중 남는 것은 결국 관련국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일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안은 9.19 공동성명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기도 하다. 2005년 9월 제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은 ① 한반도 비핵화, ② 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③ 대북 에너지 지원, ④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측면에서, 왕이 이니셔티브는 9.19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재명료화'된 중국의 정책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9.19 공동성명 10주년 토론회에서 왕이가 행한 발언은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왕이는 "9.19공동성명이 여전히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의 해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던 것이다.⁴⁰⁾

구체적으로, 왕이 이니셔티브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북미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드러난다. 북미 양국은 평화협정 논의에 대

38) Michael Mazza, "End America's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 February 9, 2016.

39) 외교부,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http://www.mofa.go.kr/trade/hanbando/nu-clear/sixpartytalks/index.jsp?menu=m_30_20_10&tabmenu=t_2>

40) "王毅：坚持9·19共同声明精神和朝鲜半岛无核化方向," 人民网, 2015年9月19日.

해서는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전 북미 양국은 ‘뉴욕채널’을 통해 평화협정 논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⁴¹⁾ 5월 4일 미 국가정보국장 클래퍼(James Clapper)가 비공식 방한해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 역시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시사한다.⁴²⁾

그럼에도 북미 양국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평화협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의 입장은 평화협정 체결 및 핵폐기 거부로 요약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으로서는 일정한 핵능력을 확보한 이상 선택폐기를 수용할 합리적 동인이 없는 것이다. 특히, 핵개발이 대내적 통치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도 있다면 북한은 향후 평화협정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핵폐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현재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이나 ‘핵동결’을 주장하면서 “9.19 공동성명이 최종적으로 사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⁴³⁾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가 북한의 핵폐기라는 전제속에서 진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3월 2일 유엔의 대북결의안 2270이 통과된 직후 미 국무부는 대변인 커비(John Kirby)는 평화협정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실현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⁴⁴⁾ 특히, 박근혜 정권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택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소외시키면서까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⁴⁵⁾

이와 같다면, 왕이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핵폐기 거부와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왕이 이

41) “U.S., N. Korea had exchanged views over peace treaty talks: source,” *Yonhap News Agency*, February 22, 2016.

42)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북·미 평화협정 한국 입장 타진했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

43) “北외무성 ‘핵보유국으로 핵군축 노력 참가,’” 『서울신문』, 2010년 4월 22일; “북 외무성, 9.19 공동성명 최종적으로 사멸돼,” 『통일뉴스』, 2016년 5월 1일; Andrei Lankov, “North Korea won't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 sanctions or no sanctions,” *The Guardian*, January 6, 2016.

44) Daily Press Briefing,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3, 2016.

45) Kang Seung-woo, Will US shift to peace treaty talks with NK? *The Korea Times*, March 7, 2016.

니셔티브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북핵 폐기 보다는 ‘북핵 동결’을 모색함으로써 북미간 입장차이를 절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핵 동결 및 북한의 NPT복귀를 전제로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⁴⁶⁾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오고 있으나, 북핵 동결 역시 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최우선 목표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안정’이라는 사실로부터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⁴⁷⁾ 더욱이 북한이 핵폐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핵동결을 통해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보상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동결을 확약받고, 이를 토대로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 정부와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⁴⁸⁾

핵군축을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도 핵동결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처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진과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발언 역시 핵동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현재와 같은 북핵문제의 방치는 곧 북한의 대미 핵위협 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동결 조치를 매개로 평화협정 논의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⁴⁹⁾

이상의 논의는 <표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북한 붕괴 전략과 북핵 인정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방치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핵위협 능력을 강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화를

46) “북 핵동결·NPT 복귀 전제로…중국, 미국에 평화협정 타진,” 『중앙일보』, 2016년 5월 9일.

47) 한반도 안정(no war)이 비핵(no nuke)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은 Samuel S. Kim,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66쪽 참조.

48) 이제훈, “‘왕이 이니셔티브’ 북핵해법 돌파구 될까,”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18일.

49) 빅터 차, “대북 외교의 판이 바뀌고 있다,” 『중앙일보』, 2016년 2월 26일; David E. Sanger and Choe Sang-hun,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dvances, U.S. Strategy Is Tested,” *The New York Times*, May 6, 2016.

통한 문제해결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중국은 왕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소한 단기적으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을 모색함으로써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방치: 북핵문제 심화	미국 주도 북한 붕괴	북핵 인정
		북핵 폐기	북핵 동결: 왕이 이니셔티브			
동 맹	중국	O	O	△	X	X
	북한	X	O	△	X	O
동 맹	미국	O	△	△	△	X
	한국	O	X(△)	△	△	X

X: 반대 O: 수용 △: 수용(가변적/ 비공식)

<표 1> 북핵문제 대응별 각국의 입장

IV. 결론 및 전망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대미관계와 대북관계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사고속에서 수립·운동되어 왔다.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미관계가 사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복적인 강압외교를 제어해야할 합리적 동인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국 견제전략 역시 견제해야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왕이 이니셔티브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 왕이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북

중 양국의 입장을 균형 맞추려는 정책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왕이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그만큼 동맹국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왕이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목표는 북핵 폐기라기보다는 북핵 동결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왕이 이니셔티브에는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중국이 주도하려는 전략적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중국이 배제된 채 북미간 직접 교섭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미중간 세력경쟁 구도속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자산인 북중동맹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남북한이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3자 혹은 4자”가 협의해야한다는 데 합의하자 비공식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⁵⁰⁾

향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운용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북핵 딜레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적으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핵 문제 대응의 구체적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사드배치를 강행(배치완료)할 경우 중국은 북중동맹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보다 고려하려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50) “3자 또는 4자... 김정일의 중국 따돌리기?”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8일.

【參考文獻】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선인, 2015.
- 그레고리 맨큐 지음, 김경환·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9.
- 김동엽, “제 7차 당대회를 통한 북한의 군사정책 독해,” 『통일뉴스』, 2016년 5월 20일.
- “내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작계 5015’ 첫 적용,” 『한국일보』, 2016년 2월 8일.
- 『노동신문』, 2013년 4월 24일; 2016년 5월 9일.
- 니얼 퍼거슨 씀, 김선영 옮김, 『금융의 지배』, 서울: 민음사, 2012.
- 로버트 브레너, 『봄 앤 버블: 호황 그 이후. 세계 경제의 그늘과 미래』, 서울: 아침이슬, 2007.
- “美차관보 ‘北공과 전략 아나...한국 닮은 평화통일 한반도 선호,’” 『연합뉴스』, 2016년 3월 26일.
- 박인규·이재호, “미국은 정말 북한 쿠데타를 바랄까?” 『프레시안』, 2016년 7월 6일.
-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1호 (2006)
-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47집 3호(2007)
- “北외무성 ‘핵보유국으로 핵군축 노력 참가,’” 『서울신문』, 2010년 4월 22일
- “북 외무성, 9.19 공동성명 최종적으로 사멸돼,” 『통일뉴스』, 2016년 5월 1일
- “북 핵동결·NPT 복귀 전제로 중국, 미국에 평화협정 타진,” 『중앙일보』, 2016년 5월 9일.
- “北 핵보유국 지위 얻기·고강도 제재 국면 전환 이중 포석,” 『서울신문』, 2016년 5월 9일.
-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 첫 명기,” 『한국일보』, 2012년 5월 31일.
- 빅터 차, “대북 외교의 판이 바뀌고 있다,” 『중앙일보』, 2016년 2월 26일.
- “시진핑, 리수용 만나 ‘북-중 협력 고도로 중시,’”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일.
- “왕이 ‘중국의 위협 사드 반대...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달성못해,’” 『연합뉴스』, 2016년 2월 26일.
- 외교부,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http://www.mofa.go.kr/trade/hanbando/nuclear/sixpartytalks/index.jsp?menu=m_30_20_10&tabmenu=t_2>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서울: 한길사, 2009.
- 이재훈, “왕이 이니셔티브 북핵해법 돌파구 될까,”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18일.
- 정병호·권현익,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 “정부 당국자 ‘얘기할 시점 아나...왕이 ‘평화협정’ 제안 거부,”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19일.

- “캠벨 ‘북한 급변논의때 중국 변죽만 울려,’” 『연합뉴스』, 2014년 2월 6일.
-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북·미 평화협정 한국 입장 타진했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
- “3자 또는 4자... 김정일의 중국 따돌리기?”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8일.
- Daily Press Briefing,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3, 2016.
<<http://www.state.gov/r/pa/prs/dpb/2016/03/253948.htm#NORTHKOREA>>
- Denny, Steven, “His ‘Other’ Legacy: Kenneth Waltz’s Defense of Nuclear Proliferation,” Sino-NK, May 21, 2013.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reen, Michel,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Gets You Nowhere,” Foreign Policy, January 7, 2016.
- Kam Wing Cha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Migrant Workers in China: ‘There is No Future as a Labourer; Returning to the Village has No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4.3 (2010)
- Kang Seung-woo, Will US shift to peace treaty talks with NK? The Korea Times, March 7, 2016.
- Kim, Samuel S.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Lankov, Andrei, “North Korea won't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 sanctions or no sanctions,” The Guardian, January 6, 2016.
- Mazza, Michael, “End America's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s, February 9, 2016.
-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1991)
- Paul, T.V.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na-Pakistani Nuclear/ Missile Collaboration,” in Lowell Dittmer, ed., South Asia’s Nuclear Security Dilemma: India, Pakistan, and China (New York: M.E Sharpe, 2005)
- Records of Conversation between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and Kim Il Sung and Kim Yong-Nam,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254>>
- Sanger, David E. and Choe Sang-hun,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dvances, U.S. Strategy Is Tested,” The New York Times, May 6, 2016.
- Scott D. Sago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2.

Song, Jiwon, "U.S. official encourages plan for N.Korea collapse," NK News, May 4, 2016.

"U.S., N. Korea had exchanged views over peace treaty talks: source," Yonhap News Agency, February 22, 2016.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Waveland Press, 2010.

"韩美部署萨德,中国该重新思考半岛战略了," 美国中文网, 2016年 7月 8日.

<<http://www.sinovision.net/politics/201607/00380117.htm>>

刘自强, "中美关系正常化与中国对外开放的启动," 『理论月刊』, 2008年 第5期.

"社评: 韩国与美商讨部署萨德是战略短视," 『环球时报』, 2016年 2月 7日.

"社评: 反制萨德, 建议国家采取五项行动," 『环球时报』, 2016年 7月 8日.

外交部声明,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年 7月 8日.

<<http://www.fmprc.gov.cn/web/zyxw/t1378537.shtml>>

"王毅: 坚持9·19共同声明精神和朝鲜半岛无核化方向," 人民网, 2015年9月19日.

<<http://world.people.com.cn/n/2015/0919/c1002-27607624.html>>

"王毅: 美在韩部署萨德系统是'项庄舞剑, 意在沛公'," 『环球时报』, 2016年 2月 13日.

"王毅: 实现半岛无核化与半岛停和机制转换并行推进," 中国外交部, 2016年2月17日.

<http://www.fmprc.gov.cn/web/wjzb_673089/xghd_673097/t1341212.shtml>

"王毅回应 '半岛若开战中国是否会再抗美援朝'," 『环球时报』, 2016年3月8日.

"希拉里详述重返亚太计划 '牵制中国'意味浓厚," 环球网, 2011年11月11日.

<<http://world.huanqiu.com/roll/2011-11/2163381.html>>

"中方重申不允许朝鲜半岛生乱生战," 中国新闻网, 2016年2月3日.

<<http://www.chinanews.com/gn/2016/02-03/7746916.shtml>>

"2015年美国货物贸易及中美双边贸易概况,"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view110209.asp?news_id=48094>

2016年1月6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16年1月6日.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329896.shtml>

【Abstract】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the Wang Yi Initiative

Park, Hong Seo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brinkmanship since the latter'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The case of this article is so-called 'the Wang Yi initiative' which was suggested by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in February 2016. In his initiative, Wang Yi proposed that countries concerned continue to work on parallel tracks for denclearization and peace treaty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Wang Yi initiative is a China's strategic consideration to address its dilemm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or its stable economic development, China ha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lest it should undermine th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y contrast, China also has to keep a stab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hedge a possible U.S. policy of containment against China. With the Wang Yi initiative, which is the reconfirmation of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China attempts to fundamentally resolve its strategic dilemm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Wang Yi initiative, China-North Korea relations, China-U.S. relations, Alliance dilemma

투고일 : 2016. 7. 15 / 심사일 : 2016. 7. 18~ 2016. 8. 8 / 게재확정일 : 2016. 8. 12